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조정사건 역대 최다 19,048건 접수처리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19,048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다. 2013년의 2,433건에 비해 8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특정인들이 대량으로 조정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성공률 51.2%, 본안성공률 69.6%, 신청효율 88.7%를 기록했다.

대량사건 16,117건 접수·처리, YTN 단일 매체 최다 1,037건 신청

위원회는 2014년 개별 신청인이 1,000건 이상 대량으로 신청한 16,117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과 구원파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가 235개 매체를 대상으로 각각 11,306건과 4,811건을 신청하였다. 단일 매체로는 YTN이 1,0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YTN 885건, TV조선 796건, 인터넷 TV조선 704건 순이었다. 중재부는 대량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언론사별, 쟁점별로 사건을 정리 하여 일괄 처리하였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청구, 72%로 가장 많아

2014년의 경우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 청구 비율이 72%로, 2013년의 66.2%보다도 5%p 이상 증가하였다. 세월호 사건 관련 대량사건 역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 청구 비율이 72%였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다른 매체에 비해 그 매체 수가 월등히 많고, 다량의 기사를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구제보도문 개선효과 유지 지속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정보도문 등 작성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이를 심리에 적용하면서 개선 효과를 월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특히 피해구제보도문의 보도 제목, 본문단락, 조정문구, 게재지면 등 항목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90%가 넘게 이행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보도문 [정정보도]

동작구,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3월14일과 19일 인터넷 환경뉴스에 「동작구, 옛 유류저장시설에 주말환경농장 강행」이라는 제목으로 “동작구가 토양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은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을 건축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바꾸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주한미군이전기지사업단에서 지난 2011년 토지오염정화작업을 완료했으며, 주말농장 운영 또한 국방부에서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해구제보도문 [반론보도]

“시민단체들, 독단적 대표와의
전쟁” 관련 반론보도문

○○일보는 3월 28일자 11면 ‘시민단체들, 독단적 대표와의 전쟁’ 제하의 기사에서 ‘도서관 친구들’ 전 회장 여○○씨가 지난해 4월 해외 도서관 지원자금으로 8,0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통보하여 갈등을 일으켰으며, 사무국장이 여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 전 회장은 당시 해외도서관 지원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는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당시 사무국장이 여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평균 195만원, 최고 3천만원 조정

2014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3,679만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중앙액은 100만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95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으로 조정된 구원파 신도들의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 사건, e머니투데이 대상 청구 가장 많아

2014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중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특정 기관과의 분쟁이 다수신청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어 뉴스1코리아 59건, 인터넷 MBN 48건, 네이버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포털인 네이버의 경우 2012년 118건, 2013년 78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포털에 대한 청구가 다소 감소하면서 신청건수 역시 대폭 감소하였다. 중앙일간지 중에는 동아일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의 경우 채널A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뉴스통신은 뉴스1코리아가 59건, 인터넷신문은 e머니투데이에 이어 노컷뉴스가 42건,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인터넷 MBN이 48건으로 해당 부문에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차지했다.

시정권고소위원회, 재난보도 등 총 302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각종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 302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2013년 289건과 비교해 13건(4.5%)이 증가했다.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마약 및 약물보도,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보도 및 자살관련보도의 시정권고는 감소세에 있으나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정권고 업무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9건의 재난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재난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유례가 드문 대형 재난사태 때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인격권 침해가 있었던바, 이러한 인격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매 분기·반기별로 심의대상 전체 매체에 시정권고 현황을 고지하는 한편, 동일 법익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는 공한을 보내고 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2차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준 강화

한편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각종 법익 침해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심의기준 체계를 재정비할 목적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성폭력사건 보도와 관련해 과열취재경쟁으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보호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보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의뢰 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에 더해 응답률과 주요 질문내용을 함께 밝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도 포함하였다.

제 1 장 ● 조정사건 접수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19,048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는 2010년 2,205건을 시작으로 4년 연속 2,000건이 넘는 수치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14년에는 2013년의 2,433건 대비 16,615건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구원파’로 알려진 특정 종교집단 및 개인의 대량사건 청구로 인한 것이다. 대량사건의 청구건수는 2014년 전체 청구건수 19,048건 중 16,117건으로 84.6%를 차지했으며, 대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하 ‘일반 사건’이라 한다)은 2,931건으로 15.4%를 차지했다.

[표 1-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접수현황

(2010. 1. 1. ~ 2014. 12. 31.)

구 분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청 구 건 수	2,205	2,124	2,401	2,433	19,048
전년대비 증감	632	-81	277	32	16,615

2. 청구권별 현황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19,048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2,888건(6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배상청구 5,725건(30.1%), 반론보도청구 305건(1.6%), 추후보도청구 130건(0.7%) 순이었다. 지난 3년 간 청구권별 조정청구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또한 다소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청구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구원파 대량사건은 정정보도청구가 11,447건, 손해배상청구가 4,670건이었으며, 일반 사건은 정정보도청구가 1,441건(49.2%), 손해배상청구가 1,055건(36.0%), 반론보도청구가 305건(10.4%), 추후보도청구가 130건(4.4%) 순이었다.

일반 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에서 특이한 점은 손해배상청구가 전년에 비해 271건이나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속 신도들이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다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청구명 \ 연 도	2012	2013	2014	합 계
정 정	1,223 (50.9)	1,195 (49.1)	12,888 (67.7)	15,305 (64.1)
반 론	315 (13.1)	274 (11.3)	305 (1.6)	895 (3.7)
추 후	69 (2.9)	180 (7.4)	130 (0.7)	379 (1.6)
손 배	794 (33.1)	784 (32.2)	5,725 (30.1)	7,303 (30.6)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 () 안의 숫자는 %

3.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4년 조정청구현황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에 의한 조정청구가 13,021건(6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종교단체 4,954건(26.0%), 기업체 331건(1.7%), 일반단체 315건(1.7%), 공공단체 103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의 조정청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이 신청한 11,306건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청한 4,811건이었다.

일반 사건은 개인이 1,715건(58.5%), 기업체 331건(11.3%), 일반단체 315건(10.7%), 종교단체 143건(4.9%), 공공단체 103건(3.5%), 언론사 90건(3.1%), 교육기관 82건(2.8%), 지자체 81건(2.8%), 국가기관 71건(2.4%) 순이었으며, 전체 조정청구 현황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3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를 제외한 모든 신청주체의 신청건수가 증가했다. 한편, 종교단체의 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량사건을 청구한 종교단체 이외에도 특정 종교단체가 58건을 청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3]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신청인 \ 연도	2012	2013	2014	합계
개 인	1,393 (58.0)	1,395 (57.3)	13,021 (68.4)	15,809 (66.2)
국가기관	96 (4.0)	36 (1.5)	71 (0.4)	203 (0.9)
지 자 체	76 (3.2)	103 (4.2)	81 (0.4)	260 (1.1)
공공단체	92 (3.8)	85 (3.5)	103 (0.5)	280 (1.2)
일반단체	310 (12.9)	255 (10.5)	315 (1.7)	880 (3.7)
종교단체	16 (0.7)	31 (1.3)	4,954 (26.0)	5,001 (20.9)
기 업 체	306 (12.7)	383 (15.7)	331 (1.7)	1,020 (4.3)
언 론 사	85 (3.5)	64 (2.7)	90 (0.5)	239 (1.0)
교육기관	27 (1.2)	81 (3.3)	82 (0.4)	190 (0.8)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현황

매체유형별 전체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 8,444건(44.4%), 인터넷뉴스서비스 4,171건(21.9%), 방송 3,776건(19.8%), 일간신문 1,378건(7.2%), 뉴스통신 1,113건(5.8%), 주간신문 141건(0.7%), 잡지 25건(0.1%) 순이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 중앙일간지가 전체 신문 신청건의 76.4%인 1,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 일간지는 14.4%인 218건, 주간신문은 9.3%인 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이 전체 방송 신청건의 46.1%인 1,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 유선방송이 36.6%인 1,382건, 지상파TV가 17.0%인 6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청구에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의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20.9%), 방송(18%), 일간신문(9.4%)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에 대한 조정청구의 비중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도 신문(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의 조정청구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 매체(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조정청구는 전체 청구사건의 약 66.3%를 차지했다.

한편 구원과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1,501건(51.2%), 인터넷뉴스서비스 435건(14.8%), 일간신문 354건(12.1%), 방송 323건(11.0%), 뉴스통신 185건(6.3%), 주간신문 122건(4.2%), 잡지 11건(0.4%) 순이었다. 일반 사건 현황은 전체 사건 현황과 마찬가지로 신문(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으며, 종이신문의 비중이 전체에서 16.3%를 차지하는 반면 인터넷 매체(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비중은 66.0%를 차지했다.

[표 1-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매체유형 \ 연 도		2012	2013	2014	합 계
신문	일간신문	496 (20.7)	380 (15.6)	1,378 (7.2)	2,254 (9.4)
	주간신문	169 (7.0)	142 (5.9)	141 (0.7)	452 (1.9)
방 송		243 (10.0)	288 (11.8)	3,776 (19.8)	4,307 (18.0)
잡 지		11 (0.5)	10 (0.4)	25 (0.1)	46 (0.2)
뉴스통신		83 (3.5)	112 (4.6)	1,113 (5.8)	1,308 (5.5)
인터넷신문		945 (39.4)	1,130 (46.4)	8,444 (44.3)	10,519 (44.0)
인터넷뉴스서비스		454 (18.9)	369 (15.2)	4,171 (21.9)	4,994 (20.9)
기 타			2 (0.1)		2 (0.0)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 () 안의 숫자는 %

[표 1-5] 2014년도 매체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신 문			방 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중앙 일간지	지방 일간지	주간 신문	지상파		종합 유선 방송	종합 편성 채널				
				TV	라디오						
19,048	1,160	218	141	641	11	1,382	1,742	25	1,113	8,444	4,171
%	(6.1)	(1.1)	(0.7)	(3.4)	(0.1)	(7.3)	(9.1)	(0.1)	(5.8)	(44.3)	(21.9)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현황

2014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18,793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98.7%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는 208건(1.1%), 재산상 손해 17건(0.8%), 사생활 침해 14건(0.1%)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구원과 대량사건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침해 유형이 명예훼손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청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구원과 소속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49건의 조정을 별도로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은 전체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안이었으며,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2,676건(91.3%), 초상권 침해 208건(7.1%), 재산상 손해 17건(0.6%), 사생활 침해 14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건의 침해유형별 현황을 2013년과 비교해보면 초상권 침해사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조정청구는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침해유형 \ 연 도	2012	2013	2014	합 계
명예훼손	2,110 (87.9)	2,252 (92.6)	18,793 (98.7)	23,155 (97.0)
초상권 침해	128 (5.3)	82 (3.4)	208 (1.1)	418 (1.8)
음성권 침해	8 (0.3)	5 (0.2)	5 (0.0)	18 (0.1)
성명권 침해	43 (1.8)	23 (0.9)	8 (0.0)	74 (0.3)
사생활 침해	101 (4.2)	45 (1.8)	14 (0.1)	160 (0.7)
재산상 손해	10 (0.4)	26 (1.1)	17 (0.1)	53 (0.2)
기 타	1 (0.1)	-	3 (0.0)	4 (0.0)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 () 안의 숫자는 %

6.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등)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235건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213건(90.6%)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도한 경우는 21건(8.9%),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가 1건(0.4%)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2014. 1. 1. ~ 2014. 12. 31.)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동의 없이 무단공표	213(90.6)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21(8.9)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1(0.4)
계	235(100)

* () 안의 숫자는 %

7.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4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조정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사건·사고·고발 등을 다룬 사회분야가 18,248건으로 전체의 95.8%를 차지했고, 정치·선거 분야가 295건으로 1.5%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산업 분야 114건(0.6%), 종교 분야 112건(0.6%), 스포츠·연예 분야 78건(0.4%), 보건복지 분야 52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분야 건수가 사회, 정치·선거, 경제·산업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구원과 대량사건 및 특정 종교단체가 신청한 58건의 조정 등 종교단체에서 많은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표 1-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조정대상 보도 분야	청구건수
사회(사건/사고/고발)	18,248(95.8)
정치·선거	295(1.5)
경제·산업	114(0.6)
종교	112(0.6)
스포츠·연예	78(0.4)
보건·복지	52(0.3)
교육	48(0.3)
미디어	35(0.2)
노동	24(0.1)
국방·외교	18(0.1)
레저·생활	10(0.1)
환경	2(0.0)
기타	12(0.1)
계	19,048(100)

* () 안의 숫자는 %

8.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4년 조정사건 중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보도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1,001건으로 9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탐사·심층·기획보도가 120건(1.1%), 오피니언 45건(0.4%) 순이었으며, 사설의 경우도 33건(0.3%)이나 차지했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조정대상기사 유형	청구건수
스트레이트	11,001(98.0)
탐사 · 심층 · 기획보도	120(1.1)
오피니언	45(0.4)
사설	33(0.3)
사진	12(0.1)
인터뷰	5(0.0)
기타	4(0.0)
계	11,220(100)

* () 안의 숫자는 %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은 제외됨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보도를 세부 장르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 관련 보도가 전체 사건의 98.1%인 7,67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94건(1.2%),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35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표 1-10] 조정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유형별 현황

(2014. 1. 1. ~ 2014. 12. 31.)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뉴스	7,676 (98.1)	다큐멘터리 및 토론	13 (0.2)
시사고발	94 (1.2)	연예 · 스포츠	10 (0.1)
교양정보	35 (0.4)	계	7,828(100)

* () 안의 숫자는 %

9. 중재부별 현황

2014년 중재부별 접수 현황을 보면, 17,750건을 접수·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93.2%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중재부 548건(2.9%), 경남중재부 150건(0.8%), 부산중재부 138건(0.7%) 등의 순을 보였다. 구원과 대량사건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언론을 대상으로 집중돼, 서울 및 경기 중재부의 조정청구건수가 급증했다.

한편 지역 중재부 가운데 구원과 대량사건이 10건 이상 접수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지역은 조정청구 건수가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대량사건 신청이 거의 없었던 광주나 전북 중재부는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경남중재부의 경우 언론사 간 분쟁이 다수의 조정사건으로 이어지면서 2013년의 6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50건이 접수·처리되었다.

[표 1-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중재부 \ 연 도	2012	2013	2014	합 계
서울중재부	1,832 (76.3)	1,806 (74.2)	17,750 (93.2)	21,388 (89.6)
부산중재부	50 (2.1)	69 (2.9)	138 (0.7)	257 (1.1)
대구중재부	29 (1.2)	48 (2.0)	113 (0.6)	190 (0.8)
광주중재부	92 (3.8)	78 (3.2)	83 (0.4)	253 (1.1)
대전중재부	53 (2.2)	75 (3.1)	96 (0.5)	224 (0.9)
경기중재부	119 (5.0)	195 (8.0)	548 (2.9)	862 (3.6)
강원중재부	11 (0.5)	20 (0.8)	16 (0.1)	47 (0.2)
충북중재부	55 (2.3)	37 (1.5)	71 (0.4)	163 (0.7)
전북중재부	47 (2.0)	39 (1.6)	53 (0.3)	139 (0.6)
경남중재부	80 (3.3)	63 (2.6)	150 (0.8)	293 (1.2)
제주중재부	33 (1.3)	3 (0.1)	30 (0.2)	66 (0.3)
계	2,401 (100)	2,433 (100)	19,048 (100)	23,882 (100)

10. 접수 유형별 현황

2013년까지는 전자우편(e-메일)을 이용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으나, 2014년의 경우는 위원회 전자문서(Eye-Net)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구원파 대량사건 대부분이 전자문서로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하면 여전히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를 통한 조정신청은 2012년 전체 접수 사건의 21.9%인 525건이었으나, 2013년 30.8%인 75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4년에는 87.9%인 16,73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언론중재 Eye-Net’을 통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이용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 결과로 보이며, 특히 대량사건 또는 다수사건 신청 시 매우 편리한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연도 \ 구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Eye-Net)	구술	기타	청구건수
2012	360 (15.0)	114 (4.7)	1,250 (52.1)	525 (21.9)	152 (6.3)		2,401 (100)
2013	336 (13.8)	137 (5.6)	1,196 (49.2)	750 (30.8)	12 (0.5)	2 (0.1)	2,433 (100)
2014	392 (2.1)	136 (0.7)	1,742 (9.1)	16,738 (87.9)	40 (0.2)		19,048 (100)

* () 안의 숫자는 %

제 2 장 ❖ 조정사건 처리현황

1. 연도별 처리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대량사건 16,117건을 포함한 19,048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16,350건(85.8%), 조정성립 1,156건(6.1%), 조정불성립결정 1,105건(5.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55건(1.3%), 기각 106건(0.6%), 각하 76건(0.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정성공률은 51.2%, 본안성공률은 69.6%, 신청효율은 88.7%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청효율의 경우 2013년(77.8%) 대비 10.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량사건 중 취하된 15,245건 가운데 14,584건이 정정 또는 반론보도되거나 기사삭제 혹은 기사수정되는 등 피해구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2012년 17.8%, 2013년 12.1%, 2014년 5.8%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중재부가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경우 2,931건이 접수되어 2013년 대비 498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906건은 조정성립되었고, 취하된 1,105건 가운데 836건이 피해구제되었다.

[표 2-1]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조정 성공률	본안 성공률	신청 효율
			동의	이의				심리 전	심리 중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592 (536)	380 (251)	64.1%	75.7%	71.5%
	%	33.5	3.2	2.7	17.8	1.8	0.5	24.7	15.8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726 (634)	363 (250)	73.4%	82.5%	77.6%
	%	37.6	2.2	2.4	12.1	0.8	0.1	29.9	14.9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5,228 (14,498)	1,122 (922)	51.2%	69.6%	88.7%
	%	6.1	0.7	0.6	5.8	0.6	0.4	79.9	5.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text{※ 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 \times 100$$

$$\text{※ 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times 100$$

$$\text{※ 신청효율} = \frac{\text{신청유효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times 100$$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2. 조정성공률

조정성공률이란 전체 조정청구사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다거나 신청내용이 부적절해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사건을 모두 제외하고 조정심리를 거친 사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조정심리가 진행된 사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은 2012년 64.1%, 2013년 73.4%, 2014년 51.2%로 나타났다. 2014년 조정성공률이 51.2%로 매우 낮은 것은 중재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정불성립된 사건이 1,105건으로 2013년의 295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세월호 사건 관련 구원파 대량사건 중 합의가 결렬되어 일괄적으로 조정불성립된 건수가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

[표 2-2]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 · 각하 · 취하 건수 (B)	조정건수 (A-B)	조정성공건수 (C)	조정성공률 C/(A-B)
2012		2,401	1,027	1,374	881	64.1%
2013		2,433	1,111	1,322	970	73.4%
2014		19,048	16,532	2,516	1,289	51.2%
계		23,882	18,670	5,212	3,140	60.2%

3. 본안성공률

본안성공률은 전체 청구사건에서 기각·각하된 사건과 심리 전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조정 심리에 부처진 사건 중에서 조정 성립되거나 중재부가 인용한 사건 및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본안성공건수에는 조정성공건수 외에도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과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을 살펴보면, 2012년 75.7%, 2013년 82.5%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2014년에는 69.6%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조정불성립된 사건이 2014년 1,105건(본안심리건수 3,638건 중 30.4%)으로 2013년 295건(본안심리건수 1,685건 중 17.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3]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 심리전 취하 건수 (B)	본안심리건수 (A-B)	본안성공건수 (C)	본안성공률 C/(A-B)
2012		2,401	647	1,754	1,327	75.7%
2013		2,433	748	1,685	1,390	82.5%
2014		19,048	15,410	3,638	2,533	69.6%
계		23,882	16,805	7,077	5,250	74.2%

4. 신청효율

신청효율은 전체 조정청구건수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 요건 적합 사건 중 조정심리 개최 여부나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뜻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을 합한 것이다.

신청효율은 2010년 역대 최고치인 79.2%를 기록했다가 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위치·크기의 격상 등 피해구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2011년을 기점으로

71%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사항과 그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대언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의 당위성을 전파했다. 이에 2012년 71.5%, 2013년 77.6%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은 역대 최고인 88.7%를 기록했다. 이는 대량사건 중 취하된 15,245건 가운데 14,511건을 포함하여 취하된 전체 16,350건 중 94.3%인 15,420건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되었기 때문이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효율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신청유효건수 (C)	신청효율 C/(A-B)
2012		2,401	55	2,346	1,678	71.5%
2013		2,433	22	2,411	1,871	77.6%
2014		19,048	182	18,866	16,728	88.7%
계		23,882	259	23,623	20,277	85.8%

5.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4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의 신청효율이 90.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손해배상(85.5%), 반론보도(8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 2013년 각각 97.1%와 96.7%로 가장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던 추후보도청구의 신청효율이 75.6%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추후보도 단독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신청된 사건이 많은데다,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금액지급을 고집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2-5]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연도	구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정정	1,223	450	40	35	238(6)	17	3	440(338)	64.2	75.5	69.3
	반론	315	113	7	3	35(2)	11	5	141(112)	75.9	84.0	78.3
	추후	69	2	2		1			64(63)	80.0	90.9	97.1
	손배	794	240	27	28	153(2)	16	3	327(274)	59.6	72.4	70.1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7	71.5
2013	정정	1,195	511	29	39(2)	155(8)	11	2	448(335)	73.6	82.9	74.9
	반론	274	129	8	1	18	3		115(93)	87.8	90.5	84.9
	추후	180	18		2	1			159(156)	85.7	96.4	96.7
	손배	784	258	17	15	121(6)	6		367(300)	66.9	78.4	74.7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884)	73.4	82.5	77.6
2014	정정	12,888	626	59	62(1)	629(7)	22	36	11,454 (10,904)	49.8	68.8	90.4
	반론	305	108	12	10(1)	39(2)	1	4	131(117)	71.0	80.3	80.0
	추후	130	29	18	1	23	3		56(49)	66.2	73.6	75.6
	손배	5,725	393	44	49(1)	414(7)	80	36	4,709 (4,350)	48.6	69.1	85.5
	계	19,048	1,156	133	122(3)	1,105(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신청효율이 90.2%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89.7%), 교육 기관(78.0%), 일반단체(73.6%), 회사(73.6%) 등의 순이었다. 2013년 신청효율이 가장 높았던 국기기관과 지자체·공공단체는 각각 36.6%와 55.1%의 가장 낮은 신청효율을 기록했다. 조정성공은 일반단체가 80.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교육기관이 78.6%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의 조정성공률은 가장 낮은 34.5%였다.

[표 2-6]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개 인	1,393	434	39	41	206(1)	26	6	641(555)	65.7	77.9	70.1	
	단 체	국가기관	96	40	6	3	12	1		34(23)	75.4	86.0	72.6
		지자체 공공단체	168	70	7		30(1)			61(48)	72.0	76.9	75.0
		일반단체	310	113	15	2	81(4)	14		85(61)	60.7	68.1	65.2
		종교단체	16	4			2	2		8(7)	66.7	84.6	78.6
		회사	391	134	9	20	88(4)	1	5	134(85)	57.0	72.2	60.3
		교육기관	27	10			8			9(8)	55.6	61.9	66.7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7	71.5		
2013	개 인	1,395	481	20	25(1)	154(10)	11	2	702(588)	73.7	82.5	79.6	
	단 체	국가기관	36	28		1	1			6(6)	93.3	96.8	94.4
		지자체 공공단체	188	96	15	3	14			60(48)	86.7	91.2	84.6
		일반단체	255	105	5	4(1)	65(4)	9		67(44)	61.5	69.8	64.6
		종교단체	31	5	2	1	1			22(16)	77.8	92.3	74.2
		회사	447	172	12	14	58			191(149)	71.9	82.0	74.5
		교육기관	81	29		9	2			41(33)	72.5	96.8	76.5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884)	73.4	82.5	77.6		
2014	개 인	13,021	579	78	45(3)	677(15)	97	44	11,501 (10,877)	47.6	64.1	89.7	
	단 체	국가기관	71	19	1	12	26			13(6)	34.5	58.1	36.6
		지자체 공공단체	184	60	3	40	16		28	37(23)	52.9	87.6	55.1
		일반단체	351	142	22	16	24(1)	5	3	103(61)	80.4	90.3	73.6
		종교단체	4,954	206	8		292	4	1	4,443 (4,250)	42.3	70.0	90.2
		회사	421	121	17	9	61			213(172)	66.3	78.4	73.6
		교육기관	82	29	4		9			40(31)	78.6	85.2	78.0
계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4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공공기관장의 신청효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무직(92.7%)¹⁾, 종교인(86.5%), 금융업종사자 (84.6%), 문화예술인(80.3%), 국회의원(80.0%) 등이 비교적 높은 신청효율을 나타냈다.

한편 신청효율이 낮은 직업군을 살펴보면 조합대표 및 협회장이 가장 낮은 44.4%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군인 및 경찰(47.1%), 시민활동가(50%),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63.6%)이 신청한 사건의 신청효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직업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45	12			11(3)			22(21)	52.2	57.7	80.0
법조인	8							8		100.0	
공무원	38	25			2			11(5)	92.6	93.5	78.9
군인·경찰	51	15	1	4	20			11(8)	40.0	56.5	47.1
기초광역단체장 ·의원	22	12	1		7			2(1)	65.0	68.2	63.6
정당정치인	44	19	2	1	13(6)			9(4)	60.0	67.5	70.5
의료인	74	11	2	2	2		1	56(41)	76.5	92.9	74.0
문화예술인	76	12		2	8			54(49)	54.5	68.0	80.3
종교인	74	34			10			30(30)	77.3	82.8	86.5
회사원	218	50	2	7	49	20	1	89(84)	48.1	64.0	69.0
언론인	86	39	2	3(3)	24	17		1(1)	60.3	65.2	65.2
교육자	210	56	3	10	38			103(92)	55.1	71.4	71.9

1) 구원파 대량사건 신청인인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이 신청한 사건은 모두 무직으로 분류됨

직업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개인사업가	377	94	32	6	55(2)	22	2	166(112)	67.4	77.9	68.0
금융업종사자	13	8		2				3(3)	80.0	100.0	84.6
연예인	4							4		100.0	
학생	32	18	2			3	1	8(2)	100.0	100.0	78.6
시민활동가	16	8						8	100.0	100.0	50.0
공공기관장	4	2						2(2)	100.0	100.0	100.0
조합대표협회장	18	6	1		4			7(1)	63.6	66.7	44.4
주부	121	32	14		25(4)		34	16(14)	64.8	69.9	73.6
무직	11,329	99	5		351	1	1	10,872 (10,393)	22.9	52.4	92.7
알 수 없음	109	13	7	8	35	32		14(12)	31.7	54.5	41.6
기타	52	14	4		23	2	4	5(2)	43.9	50.0	43.5
계	13,021	579	78	45(3)	677(15)	97	44	11,501 (10,877)	47.6	64.1	89.7

8.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뉴스통신이 94.5%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신문 90.3%, 방송 88.9%, 인터넷뉴스서비스 87.2%, 신문 79.1%, 잡지 73.9% 순이었다.

조정성공률은 잡지가 83.3%로 가장 높았으며, 뉴스통신 66.7%, 인터넷신문 56.8%, 신문 48.7% 순이었다.

한편,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하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구원파 대량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방송의 경우 91.9%, 인터넷뉴스서비스 91.1%, 뉴스통신 88.2%, 인터넷신문 83.7%의 높은 취하율을 보였다. 반면, 구원파 대량사건 신청비율이 다소 낮은 신문의 경우 취하율이 67.3%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조정성공률은 14.3%를 기록했다.

[표 2-8]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신 문	665	265	27	27	163(4)	9	5	169(107)	60.6	71.3	61.9
	방 송	243	78	10	10	63	10		72(55)	54.7	68.5	61.4
	잡 지	11	7			2			2(2)	77.8	80.0	881.8
	뉴스통신	83	23	9		18(2)	2		31(23)	64.0	71.0	70.4
	인터넷신문	945	348	26	23	157(4)	18	5	368(310)	67.5	76.7	74.6
	인터넷뉴스 서비스	454	84	4	6	24	5	1	330(290)	74.6	90.0	84.4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5	71.5
2013	신 문	522	236	23	16(1)	80(3)	4		163(105)	73.0	81.1	71.0
	방 송	288	136	7	6	41(4)	10	1	87(49)	75.3	82.3	70.8
	잡 지	10	5		3	1			1(1)	55.6	90.0	60.0
	뉴스통신	112	32	2	2	19(1)		1	56(49)	61.8	73.6	75.7
	인터넷신문	1,130	420	20	29(1)	139(2)	5		517(443)	72.4	81.4	78.8
	인터넷뉴스 서비스	369	85	2	1	15(4)	1		265(237)	84.5	92.5	89.1
	기타	2	2							100.0	100.0	100.0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 (884)	73.4	82.5	77.6	
2014	신 문	1,519	217	20	7	243	7	2	1,023 (958)	48.7	61.6	79.1
	방 송	3,776	99	16	19	152(5)	18	3	3,469 (3,219)	40.2	58.6	88.9
	잡 지	25	6	4	2		2		11(7)	83.3	100.0	73.9
	뉴스통신	1,113	66	4	7	28	22	4	982(957)	66.7	81.0	94.5
	인터넷신문	8,444	668	60	77(3)	476(4)	45	52	7,066 (6,800)	56.8	76.3	90.3
	인터넷뉴스 서비스	4,171	100	29	10	206(7)	12	15	3,799 (3,479)	37.4	56.1	87.2
	계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9.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4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성권 침해(100%)와 명예훼손(89.1%), 성명권 침해(87.5%) 등이 높은 신청효율을 보인 반면, 사생활 침해는 69.2%, 초상권 침해는 42.2% 로 낮게 나타났다. 명예훼손의 신청효율이 2013년도(76.9%)에 비해 10%p 이상 높아진 것은 명예훼손으로 신청한 구원과 대량사건 대부분이 피해구제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구원과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초상권 침해 관련 사건 상당수가 조정불성립되면서 초상권 침해의 신청효율은 2013년 82.7%에서, 2014년 42.2%로 대폭 감소했다.

[표 2-9]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명예훼손	2,110	765	65	60	420(10)	34	10	756(583)	63.4	74.8	68.9
	초상권 침해	128	23	5	3	4	9	1	83(81)	80.0	90.7	92.4
	음성권 침해	8	3			1	1		3(1)	75.0	83.3	57.1
	성명권 침해	43	1		2				40(40)	33.3	100.0	95.3
	사생활 침해	101	13	6	1	2			79(79)	86.4	94.3	97.0
	재산상 손해	10							10(2)	-	100.0	20.0
	기 타	1							1(1)	-	100.0	100.0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7	71.5
2013	명예훼손	2,252	841	50	52(2)	287(14)	14	2	1,006 (812)	72.4	81.7	76.9
	초상권 침해	82	32	2	3	4	1		40(33)	82.9	91.5	82.7
	음성권 침해	5	4						1(1)	100.0	100.0	100.0
	성명권 침해	23	7						16(15)	100.0	100.0	95.7
	사생활 침해	45	25	2	1	2			15(12)	90.0	94.7	86.7
	재산상 손해	26	7		1	2	5		11(11)	70.0	86.7	85.7
	기 타									-	-	-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 (884)	73.4	82.5	77.6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명예훼손	18,793	1,111	118	112(3)	1,035 (16)	45	71	16,301 (15,387)	51.7	70.2	89.1
	초상권 침해	208	25	13	8	66	57	4	35(24)	33.9	50.0	42.2
	음성권 침해	5	2	1					2(2)	100.0	100.0	100.0
	성명권 침해	8	5	1					2(1)	100.0	100.0	87.5
	사생활 침해	14	8		2			1	3(1)	80.0	100.0	69.2
	재산상 손해	17	4			4	2		7(5)	50.0	69.2	60.0
	기 타	3	1				2			100.0	100.0	100.0
	계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²⁾

매체별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면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경우 전체 487건 중 일간지 344건, 주간신문 122건, 잡지 11건 등 97.9%인 477건이 명예훼손이었으며, 초상권, 음성권 등 명예훼손 외의 인격권 침해가 10건(2.1%)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323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240건(74.3%), 초상권 침해 75건(23.2%), 기타 인격권 침해 8건(2.5%)을 차지했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은 2,121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1,959건(92.4%), 초상권 침해 129건(6.1%), 기타 인격권 침해 33건(1.5%)으로 나타났다. 지면매체보다도 방송과 인터넷매체에서의 초상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주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무제한 확산되는 등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대량사건을 제외한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임. 대량사건의 매체별 처리결과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

특히 케이블 TV는 명예훼손을 제외한 초상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건이 전체의 40%(45건 중 18건)를 차지했는데, 이는 방송매체 중 2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중앙방송 26%, 종합편성채널 25.2% 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중 단일매체로는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감정원과의 분쟁이 다수 신청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어 뉴스1코리아 59건, 인터넷 MBN 48건, 네이버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일간지 중 동아일보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으며, 이어 한국일보 19건, 경향신문 15건, 조선일보, 국민일보 각 13건, 한겨레 12건, 중앙일보, 문화일보 각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조정성공률이 높은 반면,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정불성립결정률이 다소 높았다.

지역 일간지 중에서는 언론사 간 분쟁을 빚은 경남도민신문이 20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으며, 이어 일간뉴스경남 11건, 경인일보 10건, 매일신문 9건, 국제신문, 현대일보 각 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일간지 가운데는 한국경제 6건,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각 5건,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각 4건, 전자신문, 서울경제 각 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채널A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MBC-TV 39건, MBN 35건, KBS-1TV 32건, YTN 26건, JTBC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방송에서는 전주 MBC-TV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채널A와 MBC-TV의 조정불성립결정률은 각각 39.0%, 30.8%로 높은 반면, JTBC는 조정성공률이 62.5%(조정불성립결정률 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뉴스통신의 경우 뉴스1코리아가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합뉴스 38건, 뉴시스 36건 순이었다. 그러나 뉴스1코리아와 뉴시스의 경우 별도의 매체인 지역본부 신청건수를 더할 경우 각각 64건, 61건을 기록했다.

일간지를 제외한 주간신문, 주간지, 잡지 등 기타 지면 매체 가운데는 시사저널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요신문, 광명지역신문, 연수신문 각 4건, 법무경찰신문, 담양신문, 물향기신문, 우리군민신문, 시사IN, 주간조선 각 3건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은 e머니투데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컷뉴스 42건, 조선닷컴 31건, 동아닷컴 30건, 세계닷컴 29건, 인터넷 경향신문 28건, 인터넷 한국일보 27건, 쿠키뉴스 26건, 인터넷 한겨레 24건, 아시아경제닷컴 22건, 아주뉴스,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각 20건, 온라인 중앙일보 19건, 인터넷 서울신문 18건, 오마이뉴스 16건, 이데일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인터넷 MBN 48건, 네이버 46건, 다음 42건, 인터넷 YTN 40건, iMBC 35건, KBS미디어 31건, 인터넷 채널A 29건, 인터넷 TV조선 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네이버, 네이트, 다음, 줌 등 포털 사건은 전체 인터넷뉴스서비스 신청건의 26.9%인 117건으로, 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15	15							10	1	3			1
	국민일보	13	13							4		6			3
	내일신문	4	4							1		2			1
	동아일보	21	20						1	7	4	1	1		8
	문화일보	11	10	1						4	6		1		
	서울신문	9	8	1						4	3	1			1
	세계일보	7	7							5					2
	조선일보	13	12	1						3	1	2			7
	중앙일보	11	11									5	2		4
	한겨레	12	11	1						5	1	3		1	2
	한국일보	19	19							12	1	4			2
	한성일보	1	1												1
	소계	136	131	4					1	55	17	27	4	1	32
지역 일간지	NEWS충남일보	2	2												2
	경기도민일보	3	3									3			
	경기신문	3	3							3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일간지	경남도민신문	20	20									19			1
	경남도민일보	2	2												2
	경남매일	5	5							5					
	경남신문	4	4							2		2			
	경남연합일보	3	3							3					
	경남일보	2	2							1					1
	경북일보	3	3							2					1
	경안일보	2	2												2
	경인일보	10	10							7		2			1
	국제신문	8	8							1					7
	기호일보	5	5							3					2
	남도일보	1	1							1					
	대구광역일보	2	2												2
	대구신문	1	1												1
	동양일보	4	4							3					1
	매일신문	9	9							3		3			3
	무등일보	3	3							1		2			
	부산일보	2	2							2					
	새만금일보	1	1							1					
	새전북신문	1	1												1
	세종매일	4	4							4					
	수도권일보	3	3							2		1			
	수원일보	1	1									1			
	시민일보	2	2									2			
	신아일보	1	1							1					
	아시아일보	1	1												1
	아시아투데이	1	1												1
	영남일보	3	2					1		1				1	1
	인천일보	2	2							1					1
	일간뉴스경남	11	11							4		7			
일일전북신문	2	2									2				
전남매일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일간지	전라일보	3	3							1					2
	전민일보	1	1							1					
	전북도민일보	1	1												1
	전북연합신문	2	2												2
	전북일보	2	2									1			1
	전북중앙신문	3	3							1					2
	제민일보	2	2							2					
	중도일보	4	4							4					
	중부매일	1	1							1					
	중부일보	4	4							1		2			1
	충남일보	1	1												1
	충북일보	3	3							1					2
	충청매일	7	7							4		3			
	충청신문	3	3							3					
	충청투데이	4	4							2					2
	한라일보	2	2												2
	현대일보	8	8							3		3			2
	호남매일	3	3							2					1
소계	182	181					1		78		53		1	50	
경제지	건설경제	1	1							1					
	매일경제	4	1					2	1				3	1	
	머니투데이	5	5							2				3	
	서울경제	3	3							1		1		1	
	아시아경제	5	5							2				3	
	파이낸셜뉴스	1	1											1	
	한국경제	6	6							4		2			
	헤럴드경제	4	4							2				2	
소계	29	26						2	1	12		3	3	11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1	1							1					
	소계	1	1							1					
특수 일간지	전자신문	3	2					1		2					1
	환경일보	2	2							2					
	소계	5	4					1		4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무료 일간지	데일리 노컷뉴스	1	1												1
	소계	1	1												1
중앙 방송	EBS-TV	7	5	2						2		2			3
	KBS-1TV	32	28	4						10	2	6			14
	KBS-2TV	7	5	1	1					5					2
	MBC-TV	39	27	10			1	1		8	7	12	1		11
	SBS-TV	15	9	5	1					4	3	5			3
	소계	100	74	22	2		1	1		29	12	25	1		33
	지방 방송	MBC경남(진주, 창원)	2	2											
광주KBS-1TV		3	3							3					
대구KBS-1TV		3	2	1						2					1
대구MBC-TV		1	1												1
대전KBS-1TV		2		2						2					
부산KBS-1TV		4	3	1						1					3
여수MBC-TV		1	1												1
원주MBC-TV		2		2						2					
전주MBC-TV		10	9	1						2	1	1	2		4
제주KBS-1TV		1	1									1			
진주KBS-1TV		2	2									2			
창원KBS-1TV		1	1												1
지방 방송	춘천KBS-1TV	2	2									2			
	충주MBC-TV	2	2												2
	포항MBC-TV	2	2							2					
	소계	38	31	7						14	1	6	2	2	13
지역 민방	G1 강원민방-TV	2	2									2			
	KBC-TV	1	1												1
	KNN	2	2												2
	OBS경인TV	6	4	2						1		1			4
	TBC-TV	1	1									1			
	소계	12	10	2						1		4			7
케이블 TV	CBS-TV	6	6							3		3			
	CJ헬로비전 호남방송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케이블 TV	SBS CNBC-TV	1	1												1
	TVN	1		1								1			
	Y-STAR	1		1								1			
	YTN	26	16	10					6		8	4			8
	연합뉴스TV(뉴스Y)	7	3	3	1						1		2		4
	홈쇼핑	1		1											1
	환경TV	1		1									1		
소계	45	27	17	1				9	1	13	7			15	
라디오	CBS-R	3	3						3						
	SBS-R	1	1												1
	TBS-R	2	2												2
	MBC경남 라디오	2	2												2
	전남CBS-R	1	1						1						
	소계	9	9						4						5
종합 편성 채널	JTBC	24	19	5					15	2	2	2			3
	MBN	35	21	14					6	2	9	5			13
	TV조선	19	14	5					4	4	2	1	1		7
	채널A	41	35	3				3	9	11	16				5
	소계	119	89	27				3	34	19	29	8	1		28
뉴스 통신	KNS뉴스통신 경남서부	2	2						2						
	NSP통신	3	3						1	2					
	국제뉴스	5	5							2					3
뉴스 통신	뉴스1코리아	59	44	14				1	18	3	9	13			16
	뉴스1코리아 울산	1	1												1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1	1						1						
	뉴스1코리아 전북	2	2						1						1
	뉴스1코리아 광주전남	1	1						1						
	뉴시스	36	27	8				1	9	1	8	5	2		11
	뉴시스 경기남부	1	1						1						
	뉴시스 울산	2	2												2
	뉴시스 인천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뉴스 통신	뉴스스 전북	3	3							2					1
	뉴스스 강원	2	2									2			
	뉴스스 대구경북	11	10	1						6		2			3
	뉴스스 부산	4	4							4					
	아시아뉴스통신	8	7	1						1		3			4
	아시아뉴스통신(경남)	1	1												1
	연합뉴스	38	36	1			1			10		4	4	2	18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3	3								3				
소계	185	157	25				3		57	11	28	22	4	63	
시사 주간 신문	민주신문	2	2						2						
	법무경찰신문	3	3								3				
	시사주간 (sisu weekly)	2	2											2	
	월요신문	2	2											2	
	일요신문	4	4						4						
	주간한국	2	2							1				1	
	소계	15	15						6	1	3			5	
지역 주간 신문	e-진안	1	1						1						
	광명지역신문	4	4						1		3				
	군산시민신문	2	2											2	
	김포신문	2	2						2						
	나주투데이	1	1						1						
	뉴스제주	2	2											2	
	담양신문	3	3								3				
	동두천신문	1	1											1	
	물향기신문	3	3						1					2	
	반월신문	1	1								1				
	빛가람타임스	2	2											2	
	서대문신문	2	2											2	
	세종포스트	2	2							2					
	순창신문	2	2						1					1	
순천광장신문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주간 신문	시사인천	1	1									1			
	안산시민신문	1	1									1			
	연수신문	4	4									4			
	열린순창	1	1								1				
	예산신문	1	1							1					
	예향진도신문	2	2							1					1
	우리군민신문	3	3							1					2
	인터넷순창신문	2	2							1					1
	주간 당진시대	1	1							1					
	주간기장신문	2	2							2					
	주간전북오늘	2	2									2			
	주간함양	2	2									2			
	충청리뷰	2	2									2			
	태안미래신문	1	1							1					
	하동저널	2	2							1					1
	합천신문	2	2									2			
	화성신문	2	2							2					
	소계	60	60							18	3	22			17
	특수 주간 신문	fn아이포커스	1	1											
검경타임즈		1	1							1					
그린경제신문		2	2												2
기독교신문		2	2							2					
기자협회보		1	1							1					
더스쿠프		1	1												1
덴탈포커스		2	2												2
마케팅뉴스		2	2								2				
미디어오늘		1	1							1					
방송대신문		1	1							1					
불교신문		2	2							2					
아유경제		2	2									2			
오마이건설뉴스		1	1							1					
의협신문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 주간 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	1	1								1				
	전기신문	2	2							2					
	치의신보	1	1							1					
	통일신문	1	1							1					
	한국성결신문	2	2												2
소계	28	28							15	3	2				8
시사 주간지	뉴스메이커	2	2							2					
	머니위크	1	1												1
	시사IN	3	3							2	1				
	시사저널	6	6							4					2
	이코노믹리뷰	1	1												1
	주간조선	3	3							1	2				
	한겨레21	1	1							1					
	한경비즈니스	2	2												2
	소계	19	19							10	3				
잡지	넥스트이코노미	2	2								2				
	신동아	2	2												2
	아이러브PC방	1	1												1
	월간조선	1	1							1					
	종교와진리	2	2							2					
	퍼블릭 아트	2	2												2
	환경미디어	1	1							1					
소계	11	11							4	2					5
인터넷 신문	(주)수도권 의양신문	1	1												1
	(주)티버리포트	1	1								1				
	CBC뉴스	2	2							2					
	CBSi	3	3									3			
	CNBNEWS	2	2							1					1
	CNEWS	1	1							1					
	DK뉴스	2	2								2				
dstv(한국교회공보)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EBN	1	1												1
	e그린경제	4	4							2					2
	e뉴스wave	1	1							1					
	e뉴조(뉴스앤조이)	7	7							3		2			2
	e머니워크	2	2												2
	e머니투데이	93	92	1						9	43	3	2	28	8
	e상조뉴스	3	3							3					
	e중앙뉴스	6	6								2				4
	IPF국제방송	1	1												1
	i태안미래	1	1							1					
	KDA뉴스	1	1									1			
	kidok.com	4	4							2		2			
	kjtimes.com	2	2												2
	KNS뉴스통신(경남)	2	2							2					
	Loves Beauty (러브즈 뷰티)	1	1												1
	MO이코노미 NEWS	3	3												3
	MBS 미니방송	2	2							2					
	MK뉴스	7	7							2					5
	MK패션	1	1												1
	NK조선	2	2							2					
	PBS 평택방송	1	1							1					
	The PR	1	1												1
	TV리포트	2	2												2
	TYN	2	2							2					
	UGN 경북뉴스	2	2									2			
	거제시민뉴스	2	2												2
	거제인터넷신문	2	2												2
	거제타임즈	5	5							3					2
	건치	3	3								3				
	검경뉴스	1	1							1					
경기경제신문	2	2							2						
경남인뉴스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경인데일리	2	2							2					
	경인지널	2	2							2					
	경인투데이뉴스	1	1							1					
	경제투데이	8	8							6					2
	교회와신앙	2	2							2					
	구리남양주넷	3	3							2				1	
	국제저널	1	1												1
	국제타임스	1	1												1
	국토매일	1	1							1					
	그린포스트코리아	1	1												1
	기독교뉴스	2	2							2					
	기독교시민연대뉴스	1	1											1	
	기독교포털뉴스	6	6							2					4
	기독인뉴스	2	2							2					
	남도인터넷방송	1	1												1
	남도타임즈	3	3							1		2			
	노컷뉴스	42	36	5				1		17	5	7	1	1	11
	뉴데일리	7	7							6					1
	뉴데일리경제	4	4							3					1
	뉴스365	1	1							1					
	뉴스TR	6		6							3				3
	뉴스미션 (News Mission)	5	5							5					
	뉴스쉐어	2	2												2
	뉴스앤거제	2	2							2					
	뉴스앤넷	2	2							2					
	뉴스엔	2	1	1								1			1
	뉴스웨이	2	2												2
	뉴스웨이호남본부	1	1							1					
	뉴스천지	8	8							2			1		5
	뉴스충청인	2	2							2					
뉴스클릭	2	2												2	
뉴스타파	4	4							2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인터넷 신문	뉴스토마토	6	6								1			5
	뉴스투데이한국	7	7						3		4			
	뉴스파고	1	1											1
	뉴스파워	3	3											3
	뉴스플러스	1	1						1					
	뉴스핍	3	2	1								1		2
	뉴스한국닷컴	2	2							2				
	뉴시스(경남)	2	2						2					
	뉴시스헬스	2	2						2					
	뉴포커스	6	6						4					2
	당당뉴스	4	4						2					2
	대전시티저널	2	2											2
	대전인터넷신문	2	2											2
	대한뉴스투데이	4	4						1					3
	더벨	4	4											4
	데일리게임	2	2											2
	데일리 그리드	1	1											1
	데일리 덴탈	1	1						1					
	데일리 서울파이낸스	1	1											1
	데일리 시사닷컴	2	2						2					
	데일리안	6	3	3								3		3
	데일리 엔케이	1	1						1					
	데일리 중앙	1	1											1
	데일리 카	1				1								1
	데일리 코스메틱 뉴스	2				2			2					
	데일리 팜	3	3						2					1
	데일리 한국	2	2											2
	동아닷컴	30	30						10	5	7	2		6
	디스패치뉴스	1		1										1
	디지털 함께걸음	1	1											1
라포르시안	1	1											1	
레디앙	3	3									3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로이슈	1	1												1
	마니아리포트	2	2							2					
	마이데일리	2		2							1	1			
	매경닷컴	7	7							2	1	2	1		1
	매일마케팅신문	2	2							2					
	매일일보 인터넷	4	4												4
	메디컬투데이	5	5												5
	모닝뉴스	2	2							2					
	몬스터집	2	1				1			2					
	미디어스	6	6							2					4
	미디어펜	3	3							2					1
	민중의소리	6	2	4								3	1		2
	부패방지뉴스	2	2								2				
	불만닷컴	2	2												2
	뷰스앤뉴스	2	2												2
	뷰티한국	1	1												1
	브레이크뉴스	6	6									2			4
	블루투데이	1	1												1
	서울교육방송	2	2								2				
	성남일보	1	1							1					
	세계닷컴	29	28					1		6	2	2	1		18
	세이프코리아뉴스	2							2	2					
	세이프투데이	3	3									1			2
	세종nTV	1							1						1
	세종방송	2	2												2
	세종인터넷신문	2	2												2
	소비자가만드는신문	1	1												1
	스타뉴스	2		2							1	1			
	스타엔	1	1								1				
	스타투데이	2	2											2	
스포츠헌서울닷컴	5	5							1					4	
시사1	2	2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시사IN LIVE (시사인 라이브)	3	3							2	1				
	시사브리핑	1	1												1
	시사제주	2	2												2
	시사코리아닷컴	2	2												2
	시사포커스신문	1	1												1
	시오랩	2	2												2
	시포커스	2	2												2
	아시아경제닷컴	22	19	3						6	2		5		9
	아시아투데이닷컴	4	4							1					3
	아시아헤럴드	2	2												2
	아유경제(AU경제)	4	4							2		2			
	아주뉴스 (인터넷아주경제)	20	18	2						3			2	2	13
	아침신문	1	1												1
	양주 동두천닷컴	1	1												1
	업코리아	4	4												4
	에너지경제	2	2												2
	에브리뉴스	2	2												2
	에이블뉴스	2	1	1											2
	엑스포츠뉴스	2	2										1		1
	엔디엔뉴스	1	1												1
	엔와이엔뉴스 (NYN NEWS)	1	1									1			
	여성종합뉴스	4	4										2		2
	여수인터넷뉴스	1	1												1
	연예스포츠포방송	1	1										1		
	오가닉라이프신문	1	1												1
	오늘뉴스(전북)	2	2												2
	오마이뉴스	16	12	4						8		2	3	1	2
	오에스이엔(OSEN)	2	2												2
	온나라타임즈	1	1												1
	온라인 중앙일보	19	18	1						1	1	4	1		1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올인코리아	2	2													2
	와이비씨연합방송	2	2													2
	우리생남	1	1													1
	울산조은뉴스	4	4									4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1	1						1							
	위키투리(wikitree)	6	5				1		3							3
	유니온프레스업뉴스	1	1													1
	유엔앤(UNN)	1	1													1
	의약뉴스	1	1													1
	이뉴스투데이	1	1													1
	이데일리(인터넷)	14	14							2	2	2				8
	이버즈	1	1							1						
	이코노믹포스트	2	2													2
	이타임즈	1	1													1
	이투데이	3	3											2		1
	이티뉴스	1	1													1
	인터넷 CJ헬로비전 호남방송	1	1													1
	인터넷 The Korea Times	1		1												1
	인터넷 강남신문	2	2								2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2	2													2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3	3									3				
	인터넷 경기매일	3	3							1						2
	인터넷 경기신문	6	6							3						3
	인터넷 경기일보	2	2													2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0	20									19				1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4	4													4
	인터넷 경남매일	5	5							5						
	인터넷 경남신문	6	6							2		2				2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3	3							3						
	인터넷 경남일보	2	2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2	2													2
	인터넷 경상일보	2	2							2						
	인터넷 경안일보	3	3							1						2
	인터넷 경양일보	1	1													1
	인터넷 경인일보	10	10							7		2				1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3	3							3						
	인터넷 경제풍월	2	2													2
	인터넷 경향신문	28	28							13	2	6				7
	인터넷 광남일보	1	1													1
	인터넷 광명일보	1	1													1
	인터넷 광주타임즈	3	3													3
	인터넷 교육과 보육신문	1	1							1						
	인터넷 국민일보	7	7							2					2	3
	인터넷 국방일보	1	1							1						
	인터넷 기독교신문	2	2							2						
	인터넷 기독교연합신문	2	2							2						
	인터넷 기독교타임즈	2	2							2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3	3							2						1
	인터넷 기독교일보	5	5								2					3
	인터넷 기자협회보	1	1							1						
	인터넷 기장신문	5	5							5						
	인터넷 나주투데이	1	1							1						
	인터넷 남도일보	1	1							1						
	인터넷 내외신문	2	2							2						
	인터넷 넥스트이코노미	2	2								2					
	인터넷 뉴스메이커	2	2							2						
	인터넷 대구신문	1	1													1
	인터넷 대구일보	4	3	1						1						3
	인터넷 대전일보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대전투데이	2	2													2	
	인터넷 대한뉴스	2	2							1		1					
	인터넷 대한투데이	2	2													2	
	인터넷 더스쿠프	1	1													1	
	인터넷 더코리아포스트	1							1								1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2	2							1				1			
	인터넷 매일신문	8	8							2		3					3
	인터넷 무등일보	3	3							1		2					
	인터넷 물향기신문	3	3							1							2
	인터넷 반월신문	1	1									1					
	인터넷 법률신문 (THE LAWTIMES)	2	2								1			1			
	인터넷 법무경찰신문	3	3									3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1	1							1							
	인터넷 베이비뉴스	4	4														4
	인터넷 병원신문	2	2														2
	인터넷 불교신문	2	2							2							
	인터넷 빛가람타임스	2	2														2
	인터넷 서대문신문	2	2														2
	인터넷 서울경제	9	9								1	2	2	2	2	2	
	인터넷 서울신문	18	17	1							5	2	3	1	2	5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3	3														3
	인터넷 세종매일	4	4							4							
	인터넷 세종포스트	2	2								2						
	인터넷 수도권일보	4	4							2							2
	인터넷 수원일보	2	2									2					
	인터넷 스포셜경제	3	3														3
	인터넷 스포츠조선	5	3	2							1	1					3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1	1											1			
	인터넷 스포츠한국	4	4									2	1				1
	인터넷 시대일보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시민의소리	4	4								4				
	인터넷 시민일보	2	2								2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4	4								4				
	인터넷 시사인천	3	2	1						1	1	1			
	인터넷 시사저널	8	8							3					5
	인터넷 시사주간 (sisa weekly)	2	2												2
	인터넷 신동아	3	3												3
	인터넷 신아일보	2	2							1					1
	인터넷 아시아일보	1	1												1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2					2				2				
	인터넷 아이러브PC방	2	2							1					1
	인터넷 안산시민신문	1	1									1			
	인터넷 엠티엔(MTN)	1					1			1					
	인터넷 여성신문	1	1										1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1	1							1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2	2							1					1
	인터넷 울산신문	1	1												1
	인터넷 위클리오늘	4	4												4
	인터넷 의정부신문	4	4												4
	인터넷 이지경제	1	1								1				
	인터넷 일간경기	2	2												2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11	11							4		7			
	인터넷 일간스포츠투	7	6				1			3					4
	인터넷 일간투데이	6	6							3	3				
	인터넷 일요서울	1	1												1
	인터넷 일요시사	4	4							1					3
	인터넷 일요신문	12	12							5			1	2	4
	인터넷 전국매일	3	3												3
인터넷 전남매일	1	1							1						
인터넷 전남일보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주간 당진시대	1	1							1					
	인터넷 주간한국	1	1								1				
	인터넷 중도일보	7	7							4					3
	인터넷 중부신문	1	1												1
	인터넷 청년의사	1	1												1
	인터넷 충남일보	3	3												3
	인터넷 충북일보	3	3							1					2
	인터넷 충청경제일보	2	2												2
	인터넷 충청신문	4	3					1		3					1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3	3							2					1
	인터넷 탄천뉴스	1	1												1
	인터넷 통일신문	1	1							1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	7										1		6
	인터넷 한겨레	24	23	1						7	1	7		1	8
	인터넷 한겨레21	1	1							1					
	인터넷 한경비즈니스	2	2												2
	인터넷 한국국정일보	2	2								1		1		
	인터넷 한국기독교공보	2	2							2					
	인터넷 한국농어민신문	1	1												1
	인터넷 한국일보	27	27							13	1	6	1		6
	인터넷 한성일보	1	1												1
	인터넷 합천신문	2	2									2			
	인터넷 현대일보	8	8							3		3			2
	인터넷 호남매일	4	4							2					2
	인터넷 화성신문	2	2							2					
	인터넷 경도신문	2	2							1					1
	인터넷 경북일보	3	3							2					1
	인터넷 광명시민신문	1	1							1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4	4							1		3			
	인터넷 국제신문	11	10	1						2					9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기호일보	7	7							4					3
	인터넷 김포신문	4	4							4					
	인터넷 내일신문	4	4							1	1		1		1
	인터넷 농민신문	1	1												1
	인터넷 뉴스신문고	4	4								2				2
	인터넷 뉴스포토로 (아이스포츠키리아)	1		1											1
	인터넷 덴탈포커스	2	2												2
	인터넷 동양일보	2	2							1					1
	인터넷 메트로	9	7	1				1		3					6
	인터넷 문화일보	12	12							3	5				4
	인터넷 미디어오늘	11	10				1			5	4				2
	인터넷 민주신문	3	3							2					1
	인터넷 부산일보	7	7							5					2
	인터넷 약사공론	3	3												3
	인터넷 영남일보	4	4							1					3
	인터넷 울산매일	1	1												1
	인터넷 월요신문	4	4												4
	인터넷 의협신문	2	2							2					
	인터넷 인천일보	6	5	1						2			1		3
	인터넷 일일전북신문	2	2									2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1	1												1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1	1							1					
	인터넷 제민일보	2	2							2					
	인터넷 제주도민일보	2	2							2					
	인터넷 제주매일	2	2							2					
	인터넷 주간조선	3	3							1	2				
	인터넷 중부매일	2	2							1					1
	인터넷 중부일보	3	3							1		2			
	인터넷 창원일보	2	2							2					
	인터넷 충청매일	6	6							4		2			
	인터넷 충청일보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충청투데이	3	3							3					
	인터넷 통영방송	2	2									2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1	1							1					
	인터넷 한라일보	1	1												1
	인터넷 헤럴드경제	11	11							5		2	1		3
	인터넷 호남신문	1	1												1
	인터넷 환경일보	2	2							1					1
	인터뷰365	4	4												4
	日刊NTN	2	2												2
	일간시사뉴스투데이	1							1	1					
	장성뉴스	1	1												1
	장애인의 주홍글씨	1	1												1
	전자신문 인터넷	8	7						1	4	1				3
	제이누리	2	2												2
	제주의소리	2	2								2				
	제주투데이	2	2												2
	조선닷컴	31	30	1						13	2		1	2	13
	조선비즈닷컴	4	3				1			2					2
	조세일보	3	3								2				1
	주택뉴스	2	2								2				
	지디넷코리아	1	1												1
	초이스경제	1	1												1
	충북인뉴스	2	2									2			
	충청TV	2	2												2
	컨슈머타임스	1	1												1
	코나스(Konas)	1	1												1
	쿠키뉴스	26	26							6	1	6	1		12
	큐프레스	2	2							2					
	타임뉴스	4	4							2					2
	텐아시아	3	2	1								1			2
	통영뉴스	2	2									2			
통합뉴스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투데이성남	1	1												1
	투데이신문	2	2												2
	투데이코리아	3	3												3
	특급뉴스	2	2												2
	티브이데일리	7	5	2								2			5
	파인뉴스	3	3											3	
	팩트TV	2	2												2
	프라임경제	2	2												2
	프린티어타임스	1	1												1
	프레스바이플	8	8							5	3				
	프레시안	6	6							2					4
	프리미엄조선	4	4												4
	한경닷컴	8	8							4	1	2			1
	한국기독일보	2	2												2
	한국기자연대	1	1									1			
	한국인권	3	3							3					
	한국인뉴스	2	2												2
	헤드라인제주	2	2												2
	헬스조선	1	1												1
	헬스코리아뉴스	2	2							2					
화순투데이	5	5							1		4				
인터넷 한국성결신문	2	2												2	
소계	1,501	1,428	52			8	6	6	1	467	137	189	43	52	613
인터넷 뉴스 서비스	CBSi	3	3												3
	EBS뉴스	4	3	1						1		2			1
	iKNN	4	4							4					
	iMBC	35	24	9				1	1	7	5	11	1	2	9
	KBS 미디어	31	25	4	1			1		6	4	11		2	8
	SBSi	1	1							1					
	SBS 콘텐츠허브	17	15	1				1		4	3	5			5
VOA Korea 미국의소리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뉴스 서비스	wow한국경제TV	3	3										1	2	
	네이버	46	46							6		2			38
	네이트	23	23												23
	다음	42	42							4					38
	인터넷 OBS경인TV	8	6	2						1		3			4
	인터넷 SBS CNBC	4	4							2			1		1
	인터넷 TBS	5	5							1	2	2			
	인터넷 TV조선	28	23	5						4	1	11	1	5	6
	인터넷 Y-STAR	2		2								2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뉴스Y)	13	11	1	1					3	1				9
	인터넷 울산MBC-TV	1	1												1
	인터넷 채널A	29	23	3				3		4	8	13			4
	인터넷 평화방송	1	1							1					
	인터넷JTBC	25	20	5						14	2	2	1		6
	인터넷 MBN	48	35	13						15	2	11	5	2	13
	인터넷 YTN	40	34	6						10	9	10	2	2	7
	인터넷 울산방송	1	1												1
	조인스 닷컴	2	2												2
	줌	6	6												6
	크리스천 노컷뉴스	12	12									6			6
소계	435	374	52	2		3	4		88	37	91	12	15	192	
계	2,931	2,676	208	5	8	14	17	3	906	247	495	102	76	1,105	

11. 중재부별 처리결과

서울 및 지역 중재부 신청효율 모두 2013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서울 중재부는 2013년 81.0%였던 신청효율이 2014년 90.0%를 기록했으며, 지역 중재부는 67.9%에서 70.0%로 상승, 전체 신청효율도 2013년 77.6%에서 2014년에는 88.7%로 10%P이상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제7중재부의 신청효율이 9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제1중재부 97.3%, 서울제 6중재부 95.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재부에서는 대전 중재부가 83.3%로 가장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으며, 대구 중재부 82.1%, 충북 중재부 81.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재부의 신청효율이 90.0%를 기록한 것은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이 보도 또는 기사삭제 혹은 수정 등으로 일괄 타결되면서 피해구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조정성공률은 서울 중재부의 경우 2013년도에 이어 서울 제1중재부가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제7중재부 71.7%, 서울 제4중재부 69.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재부에서는 대구 중재부가 100.0%를 기록했으며, 이어 부산 중재부 93.1%, 제주 중재부 92.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재부의 경우 지역 중재부에 비해 취하되는 사건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구원과 대량사건이 일괄 타결되면서 신청인이 청구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전체 255건 중 96.9%인 247건이 서울 중재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건수는 8건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서울 중재부의 경우 2013년 10.4%에서 2014년에는 5.2%로 대폭 줄어든 반면, 지역 중재부의 경우 2103년도의 17.1% 보다는 낮은 14.1%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서울 중재부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2-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2	서울1	253	64	4		78(8)	7	5	95(84)	46.6	58.1	66.4
	서울2	223	71	6	4	37	9		96(66)	65.3	78.9	66.8
	서울3	314	114	6	1	25	3		165(144)	82.2	87.7	84.9
	서울4	285	76	6	3	24		1	175(141)	75.2	86.5	78.5
	서울5	246	73	18	24	49	4	1	77(72)	55.5	73.2	67.6
	서울6	238	86	8	4	45	1		94(79)	65.7	76.7	73.0
	서울7	224	65	1	13	36(2)	12	4	93(81)	57.4	75.7	71.6
	서울8	49	8	5	2	7	3		24(23)	59.1	74.1	78.3
	소 계	1,832	557	54	51	301(10)	39	11	819(690)	63.4	76.7	73.6
	부산	50	17	2		7	4		20(11)	73.1	80.0	65.2
	대구	29	15			6			8(4)	71.4	76.9	65.5
	광주	92	49	8	4	7			24(16)	83.8	90.0	79.3
	대전	53	24		10	6			13(13)	60.0	85.0	69.8
	경기	119	43	3		43			30(22)	51.7	60.2	57.1
	강원	11	9			2				81.8	81.8	81.8
	충북	55	23			16			16(9)	59.0	60.0	58.2
	전북	47	18	9		13	1		6(1)	67.5	68.3	60.9
	경남	80	27		1	20			32(17)	56.3	66.7	55.0
	제주	33	23			6			4(4)	79.3	79.3	81.8
	소 계	569	248	22	15	126	5		153(97)	65.7	72.6	65.1
계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64.1	75.7	71.5	
2013	서울1	186	108		4		1		73(58)	96.4	100.0	89.7
	서울2	158	69		2	25			62(44)	71.9	81.1	71.5
	서울3	228	72	5	10	16(1)	3		122(108)	74.8	88.4	82.7
	서울4	272	92	8	7	4		1	160(142)	90.1	98.0	89.3
	서울5	188	48	6	13(1)	22(9)	2	1	96(79)	60.7	81.5	77.3
	서울6	286	146	6	3	4	8		119(112)	95.6	97.6	95.0
	서울7	16	7						9(4)	100.0	100.0	68.8
	서울8	472	132	11	8	117(4)	5		199(173)	53.4	61.8	68.5
	소 계	1,806	674	36	47(1)	188(14)	19	2	840(720)	75.1	84.5	81.0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 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3	부산	69	29	2		6			32(14)	83.8	89.1	65.2
	대구	48	12		1	10			25(13)	52.2	72.2	52.1
	광주	78	29	4	1	10			34(29)	75.0	84.8	79.5
	대전	75	44			2	1		28(9)	95.7	96.2	71.6
	경기	195	78	6	7	49			55(51)	60.0	68.2	69.2
	강원	20	9			4			7(6)	69.2	75.0	75.0
	충북	37	19	4		4			10(4)	85.2	86.7	73.0
	전북	39	9	2	1(1)	7			20(9)	57.9	76.7	53.8
	경남	63	13			13			37(29)	50.0	55.2	66.7
	제주	3				2			1	0.0	0.0	0.0
	소 계	627	242	18	10(1)	107	1		249(164)	69.0	77.2	67.9
계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884)	73.4	82.5	77.6	
2014	서울1	2,014	73	19		6	21	2	1,893 (1,846)	93.9	98.1	97.3
	서울2	251	77	18	13	33(1)	3	1	106(80)	67.4	82.4	71.3
	서울3	354	109	21	16	74			134(102)	59.1	72.1	65.5
	서울4	396	132	18	54	12		29	151(137)	69.4	95.0	78.2
	서울5	2,201	145	18	20	453(7)	19	34	1,512 (1,492)	25.6	51.3	77.4
	서울6	2,586	76	3	4	50	1	1	2,451 (2,381)	59.4	78.4	95.2
	서울7	7,243	64	7	1	27	1		7,143 (7,061)	71.7	86.1	98.5
	서울8	2,705	102	21	14(3)	267(8)	55	3	2,243 (1,807)	30.4	48.2	73.3
	소 계	17,750	778	125	122(3)	922(16)	100	70	15,633 (14,906)	46.4	68.0	90.0
	부산	138	54			4			80(51)	93.1	96.6	76.1
	대구	113	32			11		1	69(60)	74.4	81.4	82.1
	광주	83	29			23		3	28(14)	55.8	61.0	53.8
	대전	96	46	4					46(30)	100.0	100.0	83.3
	경기	548	118			55	2		373(270)	68.2	75.1	71.1
강원	16	4			4			8(8)	50.0	60.0	75.0	
충북	71	22			9			40(36)	71.0	72.7	81.7	
전북	53	15	2		8	4		24(12)	68.0	79.5	59.2	
경남	150	48			68		2	32(21)	41.4	47.3	46.6	
제주	30	10	2		1			17(12)	92.3	95.7	80.0	
소 계	1,298	378	8		183	6	6	717(514)	67.8	75.9	70.0	
계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69.6	88.7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같은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 3 장 ●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사건수 및 처리결과

2014년 손해배상청구건수는 모두 5,725건으로, 전체 조정청구건수 대비 30.1%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33.1%, 2013년 32.2%에 비해 약간 감소한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성립이 6.9%, 직권조정결정이 1.7%, 조정불성립결정이 7.2%, 취하가 82.3% 등으로 나타났다. 취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 4,670건 중 4,389건이 취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하된 사건 중 4,126건은 정정 또는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져 2014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신청효율은 85.5%로 높게 나타났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는 1,055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에서 290건(27.5%)은 조정성립, 91건(8.6%)은 직권조정결정, 240건(22.7%)은 조정불성립결정, 320건(30.3%)은 취하되었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

(2012. 1. 1. ~ 2014. 12. 31.)

연도 \ 구분	전체 조정 청구건수	손해배상청구건수
2012	2,401	794 (33.1)
2013	2,433	784 (32.2)
2014	19,048	5,725 (30.1)

* () 안의 숫자는 %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794 (100)	240 (30.2)	27 (3.4)	28 (3.5)	153 [2] (19.3)	16 (2.0)	3 (0.4)	327 [274] (41.2)	59.6	72.4	70.1
2013	784 (100)	258 (32.9)	17 (2.2)	15 (1.9)	121 [6] (15.4)	6 (0.8)		367 [300] (46.8)	66.9	78.4	74.7
2014	5,725 (100)	393 (6.9)	44 (0.8)	49 [1] (0.9)	414 [7] (7.2)	80 (1.4)	36 (0.6)	4,709 [4,350] (82.3)	48.6	69.1	85.5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같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4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약 3,67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상담 단계에서 조정제도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중앙액은 100만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95만원으로 중앙액, 평균액 모두 2013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으로 조정된 구원과 신도들의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건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012년 이후 손해배상청구사건 전담중재부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마련하였다. 전담중재부는 그간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사실확인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12. 1. 1. ~ 2014. 12. 31.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2	10,000	3,418,600,000	74,250,871	30,000,000
2013	100,000	5,815,000,000	60,756,386	20,000,000
2014	20,000	10,000,000,000	36,789,730	20,000,000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2. 1. 1. ~ 2014. 12. 31.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12	300,000	10,000,000	1,895,000	1,500,000
2013	100,000	20,000,000	2,532,000	1,750,000
2014	50,000	30,000,000	1,953,000	1,000,000

[표 3-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12. 1. 1. ~ 2014. 12. 31. 단위 : 원)

연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합계
2012	9 (16.7)	17 (31.5)	25 (46.3)	1 (1.9)	2 (3.6)	54 (100.0)
2013	13 (14.9)	27 (31.0)	35 (40.2)	7 (8.1)	5 (5.8)	87 (100.0)
2014	43 (38.4)	32 (28.6)	27 (24.1)	8 (7.1)	2 (1.8)	112 (100.0)

■ 손해배상사례 1 [초상권 침해]

A언론사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전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ㄱ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 B언론사는 이 사진을 전재하였고 C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비슷한 사진을 촬영하여 각각 1면에 보도했다. 이에 ㄱ씨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A언론사는 250만원, B언론사는 200만원 지급 및 사과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이 성립하였다. C언론사는 3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손해배상사례 2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A언론사는 가족 간의 갈등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ㄱ씨가 20년간 외도를 해 왔다는 ㄱ씨 배우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가정 내 관찰카메라와 부부상담 내용 등을 촬영하여 보도했다. 이에 ㄱ씨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A언론사가 ㄱ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점과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한 점이 인정되어 A언론사는 사과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ㄱ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3,000만원, 최저 10만원, 평균 약 231만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900만원, 최저 5만원, 평균 약 141만원, 음성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4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225만원이었다. 또한 성명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 최저 40만원, 평균 130만원, 사생활침해는 최고 400만원, 최저 300만원, 평균 350만원이었다. 사생활 침해의 평균 조정액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명예훼손, 음성권 침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성권 침해가 초상권 침해나 성명권 침해보다 평균액과 중앙액이 높게 나타난 것이 다소 특이한 점이다.

[표 3-6] 2014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4. 1. 1. ~ 2014. 12. 31. 단위 : 원)

침해유형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55	100,000	30,000,000	2,311,0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48	50,000	9,000,000	1,419,000	700,000	700,000
음성권 침해	3	500,000	4,000,000	2,250,000	2,250,000	-
성명권 침해	3	400,000	3,000,000	1,300,000	500,000	-
사생활 침해	2	3,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
기타	1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95.9%인 5,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203건(3.5%), 사생활 침해 12건(0.2%), 성명권 침해 7건, 재산상 손해 6건, 음성권 침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예훼손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취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 4,670건이 모두 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정신청후 또는 심리를 통해 조정 또는 반론보도 게재 혹은 기사삭제나 기사수정이 이뤄지면 즉시 취하했기 때문이다.

한편 초상권 침해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신청인 대부분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언론사는 이를 수용하려는 의사가 거의 없어, 당사자간 입장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7] 2014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침해유형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5,491 (100)	353 (6.4)	70 (1.3)	346 (6.3)	22 (0.4)	32 (0.6)	4,668 (85.0)
초상권 침해	203 (100)	24 (11.8)	20 (9.9)	66 (32.5)	57 (28.1)	4 (2.0)	32 (15.8)
음성권 침해	5 (100)	2 (40.0)	1 (20.0)				2 (40.0)
성명권 침해	7 (100)	4 (57.1)	1 (14.3)				2 (28.6)
사생활 침해	12 (100)	8 (66.7)	1 (8.3)				3 (25.0)
재산상 손해	6 (100)	1 (16.7)		2 (33.3)	1 (16.7)		2 (33.3)
기타	1 (100)	1 (100)					
계	5,725 (100)	393 (6.9)	93 (1.6)	414 (7.2)	80 (1.4)	36 (0.6)	4,709 (82.3)

* () 안의 숫자는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개인이 신청한 건은 3,067건, 단체가 신청한 건은 2,658건으로 개인 신청이 다소 많았다. 개인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유명언 회장의 전 부인 및 구원파 신도 개인들이 신청한 건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단체의 경우 역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청한 건이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일반단체가 신청한 건이 86건, 기업체 67건, 공공단체 39건, 언론사 25건, 교육기관 14건, 지자체 12건, 국가기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언론사가 타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한 사건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언론사 간 분쟁이 다수의 조정신청으로 이어진데다, 양 언론사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3-8] 2014년도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4. 1. 1. ~ 2014. 12. 31.)

신청인 유형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3,067 (100)	226 (7.4)	55 (1.8)	233 (7.6)	76 (2.5)	22 (0.7)	2,455 (80.0)
국가기관		11 (100)	2 (18.2)	2 (18.2)	6 (54.5)			1 (9.1)
지자체		12 (100)	6 (50.0)		3 (25.0)			3 (25.0)
공공단체		39 (100)	2 (5.1)	20 (51.3)			14 (35.9)	3 (7.7)
일반단체		86 (100)	33 (38.4)	9 (10.5)	7 (8.1)	2 (2.3)		35 (40.7)
종교단체		2,404 (100)	85 (3.5)	2 (0.1)	139 (5.8)	2 (0.1)		2,176 (90.5)
기업체		67 (100)	31 (46.3)	5 (7.5)	4 (6.0)			27 (40.3)
언론사		25 (100)	2 (8.0)		19 (76.0)			4 (16.0)
교육기관		14 (100)	6 (42.9)		3 (21.4)			5 (35.7)
계		5,725 (100)	393 (6.9)	93 (1.6)	414 (7.2)	80 (1.4)	36 (0.6)	4,709 (82.3)

* () 안의 숫자는 %

제 4 장 ●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 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³⁾, 2013년에 처음으로 1,000건을 상회한 데 이어, 2014년도에는 무려 8,444건의 조정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8,444건 중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 6,943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신청이 1,501건으로, 2013년의 1,13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신청사건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44.4%로 2013년의 46.4%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으로 40%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신문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83.7%를 차지했는데, 이는 구원과 관련 대량 사건이 보도 게재 혹은 기사 삭제 내지 수정된 경우 즉시 취하한 데 따른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신청 효율은 무려 90.3%를 기록했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945 (100)	348 (36.8)	26 (2.8)	23 (2.4)	157 [4] (16.7)	18 (1.9)	5 (0.5)	368 [310] (38.9)	67.5	76.5	74.6
2013	1,130 (100)	420 (37.2)	20 (1.8)	29 [1] (2.5)	139 [2] (12.3)	5 (0.4)		517 [443] (45.8)	72.4	81.4	78.8
2014	8,444 (100)	668 (7.9)	60 (0.7)	77 [3] (0.9)	476 [4] (5.6)	45 (0.5)	52 (0.6)	7,066 [6,800] (83.7)	56.8	76.3	90.3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3) 인터넷신문의 경우, 2005년에는 전체 청구건수의 5.4%에 불과했으나 2012년 39.4%, 2013년 46.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정·중재대상 매체가 아니었던 언론사 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 5 장 ●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졌다.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1년 510건을 기점으로 2012년 454건, 2013년 369건 등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는 4,171건을 기록,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에는 18.9%, 2013년에는 15.2%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21.9%로 44.3%를 기록한 인터넷신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방송사 닷컴을 상대로 대량신청한 구원파 관련 사건 3,736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435건으로, 일반 사건 전체 신청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8%밖에 되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여전히 감소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웃링크⁵⁾ 기사의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시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도 자동으로 이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아웃링크 기사에 대해 별도로 조정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여기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인링크⁶⁾ 기사에 대해서만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며,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에 의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5)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제공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링크를 시켜줌

6) 인링크 :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보도를 포털이 자사의 뉴스섹션에 별도로 게재함

[표 5-1] 최근 3년간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2	454 (100)	84 (18.5)	4 (0.9)	6 (1.3)	24 (5.3)	5 (1.1)	1 (0.2)	330 [290] (72.7)	74.6	89.8	84.4
2013	369 (100)	85 (23.0)	2 (0.5)	1 (0.3)	15 [4] (4.1)	1 (0.3)		265 [237] (71.8)	84.5	92.5	89.1
2014	4,171 (100)	100 (2.4)	29 (0.7)	10 (0.2)	206 [7] (4.9)	12 (0.3)	15 (0.4)	3,799 [3,479] (91.1)	37.4	56.1	87.2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014년 위원회가 접수 · 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3,799건(91.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 상당수가 보도 내지 기사삭제 혹은 수정 후 취하되었기 때문이다. 신청효율은 2013년 89.1%보다 다소 감소한 87.2%를 기록했는데, 이는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 중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 매체가 일괄 조정불성립된 데 따른 것으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2013년의 4.1%보다 다소 증가한 4.9%를 기록했다. 조정성립은 전체의 2.4%인 100건을 기록했다.

제 6 장 ●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중재제도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시 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부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결정을 내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제도 활용이 다소 미진했으나 2009년부터 위원회 중점추진과제로 중재제도 활성화를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에는 중재로 전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 중재건수가 11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재로 전환이 용이한 사건은 경우 추후보도사건 등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나 언론사가 스스로 오보를 인정한 사건, 그리고 매체 특성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인터넷신문 및 포털에 대한 사건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4년의 경우 포털사건이 대폭 감소한데다, 추후보도사건의 경우 대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 중재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중재사건의 침해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면 11건 모두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다.

[표 6-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연 도	구 분	청구 건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2		59	56	3					
2013		190	188				2		
2014		11	11						

2. 청구권별 현황

중재사건의 청구권별 신청 현황을 보면 11건 모두가 정정보도청구였으며, 이 중 8건은 중재 결정이 내려졌고, 3건은 취하되었다.

[표 6-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및 처리결과

(2012. 1. 1. ~ 2014. 12. 31.)

구 분 연 도	청 구 명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12	정 정	31	31					
	반 론	16	16					
	추 후	7	7					
	손 배	5	5					
	계	59	59					
2013	정 정	77	77					
	반 론	59	59					
	추 후	33	33					
	손 배	21	19	2				
	계	190	188	2				
2014	정 정	11	8				3	
	반 론							
	추 후							
	손 배							
	계	11	8				3	

3. 매체 유형별 현황

중재사건의 매체 유형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포털 10건(90.9%), 인터넷신문 1건 (9.1%) 이었다.

[표 6-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 분 연 도	청구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신문	신 문	뉴스 통신	방 송	잡 지
2012	59 (100)	51 (86.4)	4 (6.8)		1 (1.7)	2 (3.4)	1 (1.7)
2013	190 (100)	72 (37.9)	104 (54.7)	2 (1.1)	8 (4.2)	4 (2.1)	
2014	11 (100)	10 (90.9)	1 (9.1)				

* () 안의 숫자는 %

제 7 장 ❁ 자동소제기 현황

2014년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신청되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119건으로 2013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감정원 외 1인이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조정신청한 40건이 자동소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소제기된 119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1심 재판 결과 인용되거나 화해권고 결정 또는 조정성립된 사건이 10건, 취하 15건, 기각 및 각하 6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88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계속 중에 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연도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12	66	35	3	28		26	30	10	29	13	24	
2013	57	41	1	14	1	10	42	5	31	10	9	7
2014	119	60	10	48	1	9	62	48	10	15	6	88
계	242	136	14	90	2	45	134	63	70	38	39	95

※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성립은 인용에 포함하였음

자동소제기된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일간지 40건, 인터넷신문 40건, 종합편성 채널 13건, 중앙방송 7건, 인터넷뉴스서비스 6건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머니투데이가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널A 6건, MBC-TV 5건, TV조선 4건, 문화일보, MBN, 건치, 뉴스TR,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인터넷 일간투데이, 프레스바이플, iMBC 각 3건 순이었다.

[표 7-2] 2014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현황

(2014. 1. 1. ~ 2014.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중앙 일간지	문화일보	3	3					3					3
특수 일간지	머니투데이	40	20		20					40			40
특수 주간신문	미디어오늘	2	1	1				2					2
	KBS노보	1	1					1					1
주간지	시사N	1	1					1		1			
특수 주간지	넥스트	2	1		1		2						2
	이코노미												
중앙 방송	MBC-TV	5	2		3			3	2				5
	SBS-TV	2			2				2				2
종합편성 채널	채널A	6	4	1	1			6		2			4
	MBN	3	1	1	1			3					3
	TV조선	4	2		2		1	3			1		3
뉴스 통신	뉴스1	2			1	1		2		2			
	국제뉴스	2	1		1			2			2		
인터넷 신문	건치	3	2		1			3					3
	노컷뉴스	2	1	1						2			2
	뉴스타파	1	1				1						1
	뉴스TR	3	1		2			1	2			1	2
	뉴스한국닷컴	2	1		1			2					2
	마케팅뉴스	2	1		1		2					2	
	부패방지뉴스	2	1		1			2					2
	서울교육방송	2	1	1				2			2		
	시사N Live	1	1					1		1			
	이지뉴스	1			1			1					1
	인터넷 강남신문	2	1		1			2				2	
	인터넷넥스트 이코노미	2	1		1		2						2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인터넷 신문	인터넷 문화일보	2	2					2					2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3	1	1	1			3			3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2	1		1			2		2			
	인터넷 일간투데이	3	1	1	1			3			3		
	주택뉴스	2	1	1				2			2		
	프레스바이플	3	1	1	1			3			3		
	DK뉴스	2	1		1			2					2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채널A	2	1	1				2		2			
	인터넷 TV조선	1	1				1						1
	iMBC	3	1		2			3					3
계		119	60	10	48	1	9	62	48	10	15	6	88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조 정 >

(1981. 3. 31. ~ 2014.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81	44	9			12(5)	1	2	20(2)	42.9	39.0
1982	50	19			19(5)		2	10(4)	50.0	58.3
1983	71	21			22(7)	1	1	26(8)	48.8	52.2
1984	54	12			29(8)	3		10(5)	29.3	49.0
1985	59	12			28(5)	4		15(7)	30.0	43.6
1986	49	14			10(2)	1		24(11)	58.3	56.3
1987	47	10			9(4)	1		27(2)	52.6	34.8
1988	55	16			12(5)		1	26(13)	57.1	63.0
1989	121	29			35(10)		6	51(21)	45.3	52.2
1990	159	42			43(10)	1	2	71(40)	49.4	59.0
1991	220	52			48(9)	3	1	116(43)	52.0	48.1
1992	381	81			79(12)	19		202 (107)	50.6	55.2
1993	423	132			96(16)	8	2	185(84)	57.9	56.2
1994	541	162			127(10)	7		245 (128)	56.1	56.2
1995	528	111			150(25)	26	3	238 (124)	42.5	52.1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 (137)	42.7	53.1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 (108)	67.1	61.3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 (106)	69.2	59.6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99	641	244	11	18(2)	102(17)	24	5	237(92)	68.0	59.8
2000	607	198	10	15(2)	66(10)	14	2	302 (156)	72.0	63.6
2001	659	229	6	23(3)	132(27)	18	2	249 (133)	60.3	62.3
2002	511	182	18	17(3)	62(9)	8	1	223 (101)	71.7	62.4
2003	724	287	15	15(1)	101(11)	27	3	276 (158)	72.2	68.0
2004	759	283	46	22(6)	140(12)	13		255 (148)	67.0	66.4
2005	883	334	31	20(4)	181(1)	19	15	283 (160)	64.5	62.4
2006	1,087	356	29	28	226(2)	22	13	413 (250)	60.3	60.6
2007	1,043	359	22	32(2)	194(5)	42	6	388 (257)	62.8	64.8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350 (237)	75.5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82.6	73.9
2010	2,205	630	109	40(2)	157(5)	137	1	1,131 (891)	79.0	79.2
2011	2,124	725	65	40(3)	285	44	14	951 (680)	70.9	71.3
2012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 (787)	64.1	71.5
2013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 (884)	73.4	77.6
2014	19,048	1,156	133	122(3)	1,105 (16)	106	76	16,350 (15,420)	51.2	88.7
계	42,102	8,882	752	593(37)	4,750 (317)	913	190	26,022 (21,665)	64.3	77.2
	100%	21.1%	1.8%	1.4%	11.3%	2.2%	0.5%	61.8%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같은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중 재 >

(2005. 7. 28. ~ 2014.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2014	11	8				3	
계	592	534	48	1		9	
	100%	90.2%	8.1%	0.2%		1.5%	

2014년도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정·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위원회는 2014년 각종 법익 침해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심의기준 체계를 재정비할 목적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특히 성폭력사건 보도와 관련해 과열 취재경쟁으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보호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보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에 더해 응답률과 주요 질문내용을 함께 밝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기사형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편 2012년에 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TF팀을 구성하여 시정권고 효과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1년 11월 제정한 ‘시정권고 결정문 등의 송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분기별·반기별로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현황 등을 꾸준히 송부해오고 있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2014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46건으로, 2013년 59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피의자·피고인 신원을 공개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보도가 2013년 35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개인적 법익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사생활침해는 2013년 23건에서 2014년에는 2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건수는 2013년도에는 단 한건도 없었으나, 2014년도에는 5건을 기록했다.

한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2014년 256건으로, 2013년의 230건에 비해 11.3% 증가했다. 전체 시정권고의 50% 이상을 상회하던 마약 및 약물관련 보도와 자살관련 보도의 시정권고 건수가 50%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재난보도와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의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에 78건을 기록했던 자살관련 보도는 2014년에는 7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2013년 89건으로 전체 시정권고 침해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던 마약 및 약물관련 보도는 2014년에도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7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2013년 32건을 차지했던 충격·혐오감을 주는 보도 역시 2014년에는 13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2013년 31건이었던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한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4년 60건으로 93.5%나 급증했으며, 재난보도의 피해자 및 가족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보도 29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해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는 한건도 없었다.

[표 1-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2. 1. 1. ~ 2014. 12. 31.)

연도	침해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재난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기타	
2012	259 (100)	5 (1.9)	40 (15.4)	5 (1.9)	3 (1.2)		40 (15.4)	49 (18.9)	116 (44.8)		1 (0.4)	
2013	289 (100)	23 (8.0)	35 (12.1)		1 (0.3)		31 (10.7)	78 (27.0)	89 (30.8)	32 (11.1)		
2014	302 (100)	25 (8.3)	16 (5.3)	5 (1.7)		29 (9.6)	60 (19.9)	73 (24.2)	75 (24.8)	13 (4.3)	6 (2.0)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현황

2014년 한 해 동안 내려진 302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78건(5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47건(15.6%), 지역일간지 37건(12.3%), 뉴스통신 36건(11.9%), 주간지 4건(1.3%)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4.7%에서 58.9%로 다소 감소한 반면,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1%에서 15.6%로 다소 높아졌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는 전체건수대비 2012년 61.8%, 2013년 64.7%, 2014년 58.9%로 매년 5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심의대상 매체 중 인터넷신문의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 가운데 다수를 이루는 신생 매체가 각종 법익 침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지면 제한이 없다는 특성에 기인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월간지에 대한 시정권고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1-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2. 1. 1. ~ 2014. 12. 31.)

구 분 연 도	총 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 송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2012	259 (100)	51 (19.7)	23 (8.9)	1 (0.4)	3 (1.2)	21 (8.1)	160 (61.8)	
2013	289 (100)	29 (10.1)	44 (15.2)		2 (0.7)	27 (9.3)	187 (64.7)	
2014	302 (100)	47 (15.6)	37 (12.3)		4 (1.3)	36 (11.9)	178 (58.9)	

* () 안의 숫자는 %

[표 1-3]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4. 12. 31.)

연도	구분	침 해 유 형											종 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재난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총격 혐오감	기타							국가적 법익 침해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4			2											3	2	1								
1988	37	16	3		9								9			29	2	2	4							
1989	180	36	92		52											173	1		6							
1990	311	67	169	12	63											301	1		9							
1991	264	34	140	16	70					1		3				247	8	3	6							
1992	390	34	227	3	123							3				379			11							
1993	344	10	228		106											336	1		7							
1994	204	7	132		58					7						195	1		8							
1995	282		131		29						121	1				271	1		10							
1996	310	11	122	22	26	8			4	117						304		1	5							
1997	469	2	76	182	21	78				109		1				461	1		7							
1998	348		29	151	16	14			1	137						336	2	2	8							
1999	240		20	126	17	11				66						234			6							
2000	234	2	8	67	54	6				97						213	4		17							
2001	231	1	9	70	22	10				119						211	7		13							
2002	142	1		88	9					44						129	1		12							
2003	237	2	41	153	13	1				20		7				219	2		16							
2004	283	2	114	68	7	1			21	52		18				247	14	1	21							
2005	278	10	88	24	11				85	47		13				246	8	1	19	3	1					
2006	190	3	69	23	4	2		6	73	10		1				150	9		15	16						
2007	202	14	80	21	1	2			44	30	7	3				127	11	1	20	43						
2008	289	30	48	8	4			62	97	27	4	9				124	19	1	31	112	2					
2009	253	14	97	6		1		2	93		2	37				57	15		20	132	29					
2010	284	10	49	2	2			17	199	4		1				96	14	5	20	149						
2011	426	36	100		2			4	189	95						106	20	1	41	253	5					
2012	259	5	40		5	3		40	49	116		1				74	3	1	21	160						
2013	289	23	35			1		31	78	89	32					73	2		27	187	187					
2014	302	25	16		5		29	60	73	75	13	6				84	4		36	178						
계	7,290	402	2,163	1,042	731	138	29	222	1,006	1,383	58	116				5,426	155	23	416	1,233	224					
	100%	5.5%	29.7%	14.3%	10.0%	1.9%	0.4%	3.0%	13.8%	19.0%	0.8%	1.6%				74.4%	2.1%	0.3%	5.7%	16.9%	0.5%					

제 2 부

대량사건 조정청구 및 처리현황

- 대량사건이라 함은 개별 권리 주체별 청구건수가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 대량사건 신청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유 전 회장이 관여한 종교단체로 알려진 세칭 구원파인 기독교복음침례회였음을 밝혀둔다.

